

'05. 6. 9 ~ 6. 10 (2일간)

『第239回 臨時會』

道 政 質 問 書

忠清北道議會

教育社會委員會

李基東議員

한나라당 음성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초선의 도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음성군 지역
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무한 경쟁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혁신만이 21세기를 주도 하고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총액인건비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순응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생존을 위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도는 전국 최초로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작금의 현실 상황이 혁신 없이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과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4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32%대의 일본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에 인구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는 등 우리 국토는 비정상적인 성장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수도권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권과 그 외 지역간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 구성비는
2005년 48.3%에서 2010년에는 49.9%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5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인구집중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도내 인구중 청주·청원의 청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32.2%에서 2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9.8%로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폐교실태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총 86개 학교가 신설
되었는데,

그 중 74%인 64개 학교가 청주권에 신설되었으며
같은 기간 총 214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중
청주권에 위치한 학교는 10.7%인 23개 학교에 불과
하며,

나머지 89.3%인 191개 학교는

청주권이 아닌 기타 시·군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 참고사항

학교신설(1983~2005) 총86개교 청주권 64개교(74.4%)	그 외 시군 22개교(25.6%)
학교폐교(1983~2005) 총 214개교 청주권 23개교(10.7%)	그 외 시군 191개교(89.3%)
2004. 12. 31 현재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 총151개교중 청주권 24 개교(15.9%)	그 외 시군 127개교(84.1%)

위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10년후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농촌학교 127개교는 모두 폐교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온 청주권의 집중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청원 통합문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행정계층의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정당별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공통된 골격은 도, 시·군을 통폐합하여 30만~100만명 규모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청주시와 청원군은 하나의 구역으로 통폐합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와 청원군 통합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며 통합 추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청주시와 청원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지역의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 예측 가능한 상황의 종합적인 분석과

현재 오송이나 오창 등 청주권역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 이상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권에 집중 투자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조속한 수정필요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충북도청은 1908년부터 현재의 중앙공원 위치에 있던 것을 1937년 현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9천284평(3만 690m²)의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이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하고 낮은 건물로 인해 청사사용 및 시설유지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시·군의 시민단체 등에서 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해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추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제부터라도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청사이전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비 확보와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재원의 확보문제입니다.

전남도청의 경우 1,6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입니다.

충남도청의 경우 당진군 등 일부 시·군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이 초래되어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기에 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청 이전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이후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기업도시 건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인 투자 기업 첨단공장 신·증설허용 및 기간연장,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대학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본 의원은 현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추진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음성과 진천등 도내 각 지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현정부의 가장 큰 국정목표에도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의 기업들이 다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타 시·도 보다는 우리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음성군 상공회의소 등 7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조직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도 연대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째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직까지 지방행정체제는 최근의 지방분권 등 지방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다양한 인사 제도를 도입, 시행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인사행정중 승진인사 및 직위공모제,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 승진인사 실태를 부서 기준으로 살펴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7급에서 6급승진 79명중 주무과에서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되었고, 6급에서 5급 승진 53명중 주무과 40%, 그 외 60%,
5급에서 4급 승진 26명중 주무과 61%, 그 외 부
에서 39%가 승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승진을 하려면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사행정 환경이 이렇다 보니,
사업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던
직원들이, 승진을 앞두고서는 대부분이 주무과로
가기 위해 혈안이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과 주무담당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상급자의
욕구에 맞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권과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사업부서에 기획 능력이 있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유능하고 의욕적인 공무원들을 승진 보직 경로라는 관행으로 주무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무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유능한 공무원을 직접 도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 관련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는 인사의 폐쇄성과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개방형직위제는 더욱 확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여성정책관 1명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 정보화, 보건환경, 공원관리사업소 경제·투자유치, 국제협력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게는 14개의 직위에 대해 도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 성과에 대하여는 장·단의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굳이 타시·도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 국제협력, 경제, 청남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제를 시행하여 충북도정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각 분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2-1〉

개방형직위 지정·충원 현황

시도명	개방형직위 지정(59개)	충원(46개)	임용구분
서울	정보기획단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북농산물검사소장은평병원장, 서대문병원장, 아동병원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상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시립미술관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14)	정보화기획단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은평병원장, 강북농산물검사소장, 상수도연구소기술개발부장, 시립미술관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병원장, 아동병원장, 교통방송본부장(12)	외부8 내부4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장, 시립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위생검사소장,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 부산·진해자유구역청 투자기획팀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홍보팀(7)	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시립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진해 투자기획팀장, 부산·진해 투자홍보팀장(7)	외부3 내부4
대구	정보화담당관, 투자통상과장, 문화예술회관장, 오페라하우스관장(4)	정보화담당관, 문화예술회관장, 오페라하우스관장, 투자통상과장(4)	외부4
인천	공보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예술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국장, 공보담당관, 투자전략과장, 투자홍보과장, 관광개발과장, 물류지식산업과장(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국장, 공보담당관, 투자전략과장, 투자홍보과장, 관광개발과장(6)	외부5 내부1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장(1)		
대전	시립미술관장(1)	시립미술관장(1)	외부1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기획과장(2)	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기획과장(2)	외부1 내부1
경기	서울사무소장, 여성정책국장, 공보관(3)	서울사무소장, 여성정책국장, 공보관(3)	외부3
강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협력국장(2)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협력국장(2)	외부2
충북	여성정책관, 정보통신과장(2)	여성정책관(1)	외부1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1)	보건환경연구원장(1)	내부1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장(1)		
전남	복지여성국장, 정보통신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영산호 관광농업박물관장,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 투자유치본부장, 광양만 첨단산업팀장(7)	복지여성국장,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3)	외부3
경남	투자유치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광양만 투자정책팀장(4)	투자유치과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광양만 투자정책팀장(4)	외부1 내부3

자료 : 국회의원요구자료중에서 발췌

셋째,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 관련 질문입니다.

사관학교출신 특채제도는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관학교 출신장교 국가기관 활용에 대한 지시」에 의해

1977년부터 사관학교 출신자를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으로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폐지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고, 국회에서도 매년 야당에 의해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었던 제도로서,

29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의 인사관리에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12명의 사관학교 출신자를 특채하여 1명을 전출시켰고 현재는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2급 3명, 3급 3명, 4급 5명으로 11명 전원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원3명(국가1, 지방2)중 3명 전원이, 3급 정원 8명(국가1, 지방7)중 3명이 사관학교 출신자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사관학교출신의 4급 5명이 현직급 승진일로부터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의 고경력자들이라서 조만간 3급으로 승진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2급과 3급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여 일반승진자들과 고시출신자들은 상당기간 3급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자가 전국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을 제외한 우리도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전남의 경우는 고령자가 많은데 비해 우리도의 경우 나이가 젊고 특정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과 관례상 특정분야의 출신들이 상당기간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일반승진자나 고시출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조직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없어 도정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1〉 제도시행에 대한 관련 부정적인 의견

- 사관학교 출신 특채제도 시행으로 내부 승진요소가 감소됨으로 인해 재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었음, 6급의 승진대상자들의 피해의식 발생.
(황일만, 한국중견공무원의 가치체계와 직무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사학위논문, 1991.)
- 고시출신과 일반 승진자 공히 부정적인 비율이 높고 3-4급의 상위 직급에서만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높음.
(황일만, 한국중견공무원의 가치체계와 직무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p 111, 1991)
- 육사출신의 특채사무관의 행정부 유입으로 인해 귀하의 사무관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혀 상관 없다 5.7%, 약간 영향 있다. 9.1%, 큰타격이 있을 것이다. 73.3%로 나타났으며 절대 다수가 조직내 육사 출신의 유입을 배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은란, 지방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p 61, 1991)

〈표1-2〉

사관학교 특채자 승진실태

현직위	현직급	성명	최초임용일	4급승진일 (승진소요기간)	3급승진일 (승진소요기간)	2급승진일 (승진소요기간)	비고
○○○	국가2급	○○○	80.10. 1	94. 7.29 (13년10 월)	99. 9. 1 (5년1월)	03.12.11 (4년 3월)	
○○○	지방2급	○○○	78.10. 2	92. 2.26 (13년 5 월)	99. 10. 5 (7년 10 월)	04. 3.30 (4년 6월)	
○○○	지방2급	○○○	80.10. 1	90. 1.30 (9년 4월)	95.12.28 (5년11 월)	01. 2. 9 (5년1월)	
○○○	지방 시설3급	○○○	79.10.12	94. 1.14 (14년4 월)	99. 3. 17 (5년3월)		
○○○	지방3급	○○○	82.10. 1	95. 8. 9 (12년11 월)	04. 1.26 (8년5월)		
○○○	지방3급	○○○	81.10. 1	94. 4.27 (12년7월)	02. 1.25 (7년9월)		
○○○	지방4급	○○○	83.10. 1	97. 8. 1 (13년10 월)	8년경과		
○○○	지방 시설4급	○○○	80.10. 1	95. 8. 9 (14년10 월)	10년경과		
○○○	지방4급	○○○	87. 7. 1	98. 9.25 (11년3월)	7년경과		
○○○	지방4급	○○○	86. 6. 1	97. 2.26 (10년9월)	8년경과		
○○○	지방 시설4급	○○○	87. 7. 1	98. 9.11 (11년2월)	7년경과		

〈표1-3〉 시도의 사관학교 특채자 배치실태

(2005. 1. 20현재)

시도별	계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공무원정원	비율(순위)
계	105		32	56	14	3		
서울	21		1	12	7	1	47,167	0.045
부산	9		3	6			15,643	0.058(③)
대구	4		1	2	1		10,464	0.038
인천	5		1	4			11,546	0.043
광주	1				1		6,160	0.016
대전	-						6,267	
울산	1			1			4,922	0.049
경기	7		1	4	1	1	37,938	0.018
강원	1			1			15,343	0.015
충북	11		5	3	3		11,307	0.097(①)
충남	9		2	6		1	15,173	0.059(②)
전북	6		2	4			15,371	0.039
전남	11		7	4			19,535	0.056(④)
경북	9		6	3			22,750	0.040
경남	9		3	5	1		20,407	0.044
제주	1			1			4,540	0.022

□ 다음은 교육청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의 업무중 정책결정에 주로 종사하는 직위는 국가공무원으로 보직케 하여 지방공무원은 거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종사할 기회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 교육청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 그 직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부교육감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중앙도서관장과 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동급임에도 지방직이 하위직위에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 높다는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어야 마땅함에도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5년째인 아직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계급체제하에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직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현조직 체계는

매우 모순된 것이며,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진이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인재가 중요한 보임을 받아 의사결정시 경험과 지식을 살려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과 본청 과장급이 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인 반면, 학생종합수련원장과 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승진시켜, 중요한 직위(기획관리국장 등)에 보임 활용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에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속기관장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교육장 임명 관련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1991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등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반교육행정의 전문적인 경험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학관만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욕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들만이 교육장에 임명됨으로써
종합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당해 교육청관내의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교육장에 일반행정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 인사시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원 인사시기에 대하여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2002년부터 2005년 1학기까지 도 교육청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인사발표 시기를 보면 내정 발표일자가 발령일전 빠리는 12일전,

늦게는 4일전으로서, 교사와 교감은 평균 10.7일, 교장은 평균 7.5일로 나타나 있으며,

시·군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의 내정발표 후 빠르면 당일, 늦으면 2내지 3일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정발표 시기가 학기 개시일에 촉박하다보니 학교에서는 부서 배치, 반편성, 업무분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사입장에서는 전출입 기관 인사, 거주지 숙소 선정, 주민등록이전, 가족신상 정리, 교안연구 등 근무처에서의 학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는 상황이 매년 반복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수년간 반복됨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인사이동 시기가 학기시작 몇일전이 가장 합리적인지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인사관련 질문의 첨부자료

〈교육청 관리직의 직급기준 및 임용 실태〉

구분	직 위	직급기준	임 용	
본 청	부교육감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부이사관	
	기획관리국장	서기관	서기관	
	기획관리국 산하과장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교육국장	장학관	장학관	
	교육국산하 각 과장	장학관	장학관	
	의회사무국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의사과장	지방서기관	지방서기관	
직 속 기 관	과학 연구원	과학연구원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총무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그외부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단체 교육 연수원	원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총무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그외부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중 앙 도서관	관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그외과장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학생 회관	관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	지방서기관
		총무,관리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운영과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학생 종합 수련원	원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기획지원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수련운영부장	학생수련지도관	학생수련지도관
		임해수련운영부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다음은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 관련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시설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의 비상식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개교 시기 및 학생수용 대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래 성장동력인 IT, BT산업의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도교육청에서 충북도청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산업단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하였고,

신설예정인 학교의 개교시기도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시기보다 길게는 7개월씩 늦어지는 바람에
입주예정 주민들이 벌써부터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학교용지 협의 경위와 각급 학교의 위치를 현재
계획과 같이 지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또는 인근지역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첨단신도시라는 오창의 이미지에 맞는 생활기반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학교용지를 지정할 경우 행정기관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신설시 계획단계부터 개교까지에 이르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협의기간 및 설계기간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하여 2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신설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충하는 등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과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청원교육청에서는 민원예방을 위해 오창
과학산업단지내 초등학교용지와 중학교 용지의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80%이상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학교용지 변경계획이

무산되고 당초계획대로 학교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이 훨씬 많았음에도 학교용지변경을
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행정예고는 왜 실시
한 것입니까?

교육당국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정처리로 인해
입주예정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 예견됨에도 행정예고 결
과를 무시하고 당초계획대로 학교건립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과 청원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신청한 학교시설용지

변경 요청에 대하여 충북도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없이 승인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